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재열



전남도내 상당수 시·군이 5·31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뒤숭숭하다. 구례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전직 군수가 흥기에 쫓기는 사건이 발생했고 화순군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단체장이 사퇴를 선언했다. 화순군은 부단체장까지 민주당 후보로 신안군수 재선거에 나서며 따라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노란 뜨면치고 받는 중앙정치와는 달리 우리 고장만큼은 생기가 돌기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기대를 외면한 불행사나운 모습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다시 도입된지 10여년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자치가 네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도 제대로 착근되지 못한 것은 지역의 참일꾼을 거러 뽑지 못한 유권자들의 책임이 크다.

결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간의 후원금 수수는 아무리 합법이라 해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기초단체에 대한 정당 공천제는 재검토해야 한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게 정당 공천제를 도입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물론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정당 공천제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정당 공천제는 이론적으로 책임정치의 원리와 정당발전을 구현하

속 정당과 국회의원을 먼저 의식해선 지방자치의 맥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하부구조로 놓아 두어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부도덕한 연결고리 끊자
'▲재선 생각을 버리면 재선 그 나머지 보인다 ▲시장·군수가 공부하는 만큼 지역은 발전한다 ▲선택과 집권이 리더십의 핵심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시장학교(Mayors' Academy)를 개설한 박인순 변호사가 단체장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으로 꼽은 것들이다. 여기에 중앙정치와의 부도덕한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단체장 고소·고발 잇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개발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도 임기 4년이 빠듯한 자치단체장들이다. 고소·고발사태에 휘둘리면 권위는 실추되고 정책 수행에도 막

정치권, 제발 기초단체를 놔줘라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앙은 물론 지방까지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인재 발굴 및 훈련을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당초 취지다. 그러나 상향식 민주적 정당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정당 공천제는 일반 유권자들은 뒷전인 채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시켰다. 오죽하면 얼마 전 여의의원 44명이 기초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을까. 중앙정치권 스스로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이 주민보다는 소

속 정당과 국회의원을 먼저 의식해선 지방자치의 맥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하부구조로 놓아 두어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시설

국제회의 불모지 광주·전남...대채 서둘라

광주와 전남이 국제회의 불모지라고 한다. 컨벤션산업의 성장세를 타고 서울과 부산 등 다른 도시의 국제회의 개최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광주와 전남은 유치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아시아 문화수도나 서남해안 관광거점을 내세울 수는 없다.
한국은 세계적 컨벤션 전문 통계기관인 UIA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국제회의 유치 실적에서 전년보다 3단계 상승한 세계 14위를 기록했다. 도시별 아시아 순위에선 서울 2위, 부산 10위, 제주 11위였다. 광주, 대구, 경기, 인천도 각각 10건, 7건, 4건, 3건을 유치했다.
광주와 전남이 국제회의를 한 건도 개최하지 못한 것은 국제도시로서의 기반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반증이다. 다행히 올해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와 6·15민족통일대추전 등의 행사를 치렀지만 광주도의 행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컨벤션 산업은 국제회의와 박람회,

교육비 민간부담 OECD 중 '최고'라니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비(공교육) 가운데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발간된 '2005년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2.9%로 평균보다 4배나 높아 34개 OECD 회원·비회원국 가운데 단연 최고였다.
여기에 학원비 등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사교육비를 포함한다면 한국 가정의 교육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추정된다. 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률 기피한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문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데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주요 대학들이 2008년도 입학시험에 논술고사 비중을 크게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학교현장에서는 내실있는 논술 교육이 거의 불가능한 만큼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에

기고



전도영

최근 관심을 끌었던 외국계 사모펀드의 경우 천문학적 이익을 내고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문제가 발생했다.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 불협음이 깊어 줄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가 반문한 것이고, 둘째는 보증을 서 주는 친구를 위해서 그만돈 돈을 버틸 만한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만약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긍정적이었다면 보증을 설 것이 아니라, 보증을 요구한 만큼의 금액을 그 사람에게 주고, 자기 이름을 빌려주는 보증행위는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징수협조, 국가간 이중과세조정, 과세 소득이

이란 두개의 의제가 논의 되는데, 특히 최근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를 통해 국제적 조세 회피의 심각성과 과세당국 간 협조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한 우리나라 국제청이 OECD사무국 등과 '국제적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의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또 이번에 미국·일본 등 OECD 주요 회원국은 물론, 중국 등 신흥 경제대국의 과세당국과 양자회담을 개최함으로써 과세 당국 간 협력 기반을 구축해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도 수행한다고 한다.
최근 들어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까지도 명확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OECD회원국 국제청장 회의에 부처

전편 관련 상호협의, 상대방 국가에 진출한 자국기업 간접지원 등에도 과세당국 간 협력과 정보 공유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3차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제청장회의가 13일부터 3일간 한국에서 열렸다.
조세행정 분야에서는 최대 국제행사로서 30개 OECD회원국 국제청장과 중국·인도 등 10여개 비회원국 국제청장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조세 전문가가 모여 각국의 직면한 조세행정의 공통 현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고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고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적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와 '조직개혁

無等鼓

참여정부는 10·29 → 8·31 → 3·30로 이어지는 세 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왔다.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도 있으나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정도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때 영국에서 비싼 집값과 물가 상승에 다른 국가에서 영국으로 출·퇴근하는 국제 통근자들이 등장했다는 최근 외신이 눈길을 끈다. 유럽 다른 나라에 집을 사두고 영국의 직장으로 오가는 영국인들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지만, 점점 더 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 가격, 값싼 항공료, 빠른 철도 교통, 통신통인 등으로 다른 나라에서 집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 조사 결과 영국인 5명 중 4명은 열악한 영국의 철도와 도로로 출·퇴근하는 스트레스를 덜고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 영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까운 통근 거리 때문에 프랑스 북부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최근 몇 년간 증가했다"며 "영국에 비해 물가도 싸고, 투자자 자본 수익률도 더 높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 통근자 벨트라가 멀리 동쪽으로의 에스토니아의 탈린, 남쪽으로의 모로코의 마라케시까지 뻗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통근 시간과 거리가 만만치 않아 매일 출·퇴근하는 것은 다른 수단을 찾는다. 이러한 추세를 따라놓기 위해 영국 남부 퀘츠주의회는 교통요금 인하 등 대책도 강구 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안에서 구에 따라 집값 차이가 크고,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이 수두룩하다. 그럼에도 영국과 달리 국제 통근은 고사하고 지방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경우도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 '지방에서 서울 출근 러시'. 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올 법도 한 상황인데도 말이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業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처세술의 귀재가 보증서는 법

없도록 못 봐야 놓고 있다는 등 즉답을 피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도 잔뜩 돈이 궁한 그 친구는 다음 날 아예 회사로 찾아와 천만원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곧 갚는다니, 길어야 한 달이라며 때를 쓰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처세술의 귀재로 불리는 강철왕 앤드류 카페기는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원칙을 철저히 정해 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어느 날 보증을 서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카페기는 한 마디로 거절해 버렸다. 이 사실을 들은 친구가 평소와 달리 단호했던 그에게 왜 거절했느냐고

물자, 그는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서 "NO!"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그 질문의 첫째는 보증을 섬으로써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최고의 액수를 불협음이 깊어 줄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가 반문한 것이고, 둘째는 보증을 서 주는 친구를 위해서 그만돈 돈을 버틸 만한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만약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긍정적이었다면 보증을 설 것이 아니라, 보증을 요구한 만큼의 금액을 그 사람에게 주고, 자기 이름을 빌려주는 보증행위는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것이다.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요즈음 경기

은펜클럽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사고나면 나몰라라 대리운전 회사 문제 많다

얼마전 대리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 당시 운전자를 찾을수 없어 대리운전을 불렀던 차량 소유자가 모든 교통사고 책임을 떠안아야 했던 사건이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대리운전 회사만 1천개가 넘는다. 퇴근시간만 되면 휴대 전화로 대리운전 문자 메시지가 여러 차례 오는 것도 누구나 경험하는 일일 것이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1천개가 넘는 대리운전 회사는 제대로 보험을 들고 운영하는 회사는 극히 드물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 또한 책임보험을 들지 못한다고 한다.
물적 피해를 비롯, 인명 피해 사고 등 대

리운전자가 사고를 났을시 책임보험 부분이 문제가 되어 차주는 자신의 보험에서 각종 할증을 감수해야만 한다.
대리운전 회사 인가시 대리운전자를 위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손보업계에서 회피하고 있는 책임보험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하는 것도 필요조건을 이용하는 차량 소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다.
읍주후 대리운전자를 부르는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대리운전자의 신분별 꼭 확인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형진·나주경철서

화장실 칸막이 바닥과의 간격 줄여야

얼마전 지방 재래시장의 공중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황당할 일을 당했다. 화장실 안에서 오른쪽에 우산, 왼쪽에는 손가방을 내려놓고 불의를 보고 있는데 화장실 왼쪽 칸막이 밑으로 갑자기 목장갑을 착용한 손이 불쑥 들어와 손가방을 가져가려는 것이다.
너무 놀랐지만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껏 잡아 당겼지만 놓치고 말았다. 급히 밖으로 나가 손가방을 들고 뛰어가는데 모자 쓴 남자를 향해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며 뒤쫓아

갔다. 계속 따라가자 그는 2층에 손가방을 버리고 도망을 쳤다.
현재 대부분의 공중화장실 칸막이의 높이는 2m가 되지 않고 바닥에서 5~10cm 간격이 있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장실 칸막이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고, 바닥과의 간격을 1~2cm로 줄인다면 이같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박미진·목포시 서산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